

이덕일의 '역사의 창'



실리외교와 이념외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외교의 하책(下策)은 이념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상책은 국익을 우선하는 실리외교다. 조선의 군주 중 인조는 이념외교의 대표격이고 광해군은 실리외교의 대표격이다. 광해군 때 중원을 차지한 한족(漢族)의 명(明)과 만주족의 후금(後金:청) 이 다투었다. 만주족 누루하치는 1616년(광해군 8년) 흠여진 부족들을 통합해 후금을 건국했는데 후금이라는 국호는 약 5백여 년 전 한족의 송(宋)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금(金:1115-1234)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뜻이었다.

에 억류된 강홍립은 광해군에게 물레 밀서를 보냈고 이 밀서 덕분에 조선은 후금의 동정을 살살이 알 수 있었다.

광해군은 국교회복을 원하는 일본과도 과거의 은연을 묻어둔 채 수교에 응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동부 쪽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야스가 임란 때 자신은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면서 수교를 요청하자 광해군은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도굴한 범인 인도를 요구했다. 도쿠가와 막부가 대마도의 죄수 두 명을 인도하자 이들을 호수하고 국교를 수복했다. 광해군은 물론 이 두 죄인이 도굴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둘의 효수로 명분을 살리고 수교한 것이다.

정권을 빼앗긴 서인들은 광해군의 이런 실리외교를 임금의 나라 명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고 광해군 15년(1623) 계해정변(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옹립했다. 인조와 서인정권은 실리외교를 전면폐기하고 '명을 받들고 청에 반대'하는 송명반정(崇禎反清)노선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가 인조 5년(1627)의 정묘호란과 인조 14년(1636)의 병자호란이었고, 인조는 삼전도 치욕을 겪어야 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외교행보를 광해군의 실리외교의 재연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공산 전체주의' 같은 용어 사용에서

보여지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냉전적 사고로 외교를 다루는 듯하다는 점이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는데 돌아온 것은 혼란이었던 것과 사드배치 보복 등이 겹치면서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되었다. 자국을 역사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주변부로 본 문재인 정권의 외교관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한미동맹에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동맹으로 승격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이념외교를 합리화시켜주지는 않는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서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이 가진 지정학적 구도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파마스트 총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과거 적국이었던 미국과 최고수준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맺었다.

홍범도 장군이 순국했던 1943년 당시 임시정부의 자리에서 소련은 미국·영국·중국과 함께 동맹국이었던 것이다. 그런 홍범도 장군에게 철지난 '공산주의자' 딱지를 씌우는 현 정권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강경석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원장

조산(早産) 관리의 중요성

이, 1250-1500g에서는 약 95%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조산아의 생존율을 예측함으로써 조산관리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아의 정확한 임신주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산기 사망율과 이환율은 임신 24에서 26주 사이 협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4주에는 생존율이 약 20%이지만 25주에는 50%까지 증가해 하루에 약 4% 정도씩 생존율이 증가하므로, 임신주수는 생존율과 질병 이환율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25주 미만이고 생존의 경제선상에 있는 태아의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계면활성지료제의 사용, 산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투여, 기계적 인공호흡기의 사용과 같은 요소들의 덕분이다. 생존능력을 갖는 임신주수와 체중의 임계치는 대개 24~25주, 500-750g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 24주 이전에 태어난 영아의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장애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산의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진통과 조기양막파수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신부나 태아의 내과적 혹은 산과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조기 분만을 유도한 경우(전치태반, 임신중독증, 태아절박가사, 자궁내 성장제한,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태아사망 등)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절박유산(임신 초기의 질 출혈),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흡연, 임신부 체중 증가 불량, 불법 약물의 복용, 과체중과 비만, 고령임신, 저연령 임신, 과도한 신체활동, 우

울, 불안, 스트레스) 등도 조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연적인 진통과 연관된 위험인자로는 생식기계 감염, 다태임신, 임신 2·3삼분기의 출혈, 이전의 조산 기왕력 등이 있는데, 자연적인 조기진통이 발생하면 조기양막파수, 그리고, 자궁과 관련된 자궁경관무력증, 용모양막염이 연이어 일어나고 조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 세조 때의 정난공신으로서 성종 때까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는 칠삭둥이로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조산아다.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34주가 넘어서면 조산이 되더라도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드물게 되었지만, 필자가 수련의 생활을 하던 80년대 말~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임신 8~9개월 이전에 출생한 조산아는 생존율이나 이환율의 성적이 좋지 못했음을 기억한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칠삭둥이 아기가 어떻게 생존했으며 훗날 어떻게 해서 비상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지금은 의문이 든다.

어찌됐든 조기분만은 생존율, 유병율에 문제가 발생하며, 임신 34-36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적으리라고 예상되는 후기조기분만(Late Preterm Birth)에서도 장기적인 통계에 불리한 결과를 보인다. 가뜰이나 함께출산율과 신생아 출생수가 감소함에 더 불구하고 오히려 조기분만의 비율은 증가되는 상황을 보며,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젊은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그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건강보험 특사경제도 도입에 대한 단상



김경호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군 12개월에서 길게는 4년 5개월까지 기간이 소모되어 그 사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일례로 공단 이사장(정기석)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꼽았다. 이를 계기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와 움직임 또한 탄력을 받는 분위기이다.

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빠르게 환수할 수 있고, 사전에 진료비 지급을 정지시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공단의 설명도 참고할 만하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성, 수사의 효과성, 불법개설의 예방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오고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반 경찰보다 더 효과적인 수사와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수사 기간의 단축과 환수 금액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론으로, 특사경의 존재는 불법개설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특사경 도입만으로도 불법기관의 개설 시도 자체를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도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수사 권한 법제화, 특사경 추천권의 제한,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 지침 제정·운영 등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기관 개설은 꽤 오래된 문제이지만 최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여야 4개 국회의원의실에서 특사경 제도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현재 4건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단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공단이 특사경권을 갖게 되면 권한 남용이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률안을 보면,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불법 개설 범죄에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오히려 의료계는 특사경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선량한 의료기관의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제도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건강보험이라는 집 안에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집안의 쥐를 잡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고양이를 들여놓는 방안이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국회는 불법개설기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발의된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社說

광주~부산 항공 노선 개설로 상생 도모해야

최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번에는 광주와 부산간 직항노선 개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두 도시를 오가려면 3시간 30분 걸리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자기 차량을 이용해야한다. 기차는 5시간 40분이나 걸리는 무궁화호가 하루 한 편 운행중이고, 오송역에서 환승해 부산과 공주를 오가는 KTX를 탈 경우에도 3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반면 항공편이 생기면 광주-부산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5년과 2021년 광주상공회의소의 소와 부산시가 광주~부산간 항공노선 개설을 요구하는 등 양 지역은 직항 개설을 위한 제안을 계속해왔다.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경우 안정적인 물류 공급과 운송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또 영호남 상생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경제 벨트 구축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선거철이면 2시간 대 고속철도 공약을 내놓지만 건설비용과 시간 등을 따져본다면 항공노선 신설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김해 노선은 1997년 개통된 뒤 아시아나항공이 1월 1회씩 5년간 운영한 적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항공노선 허가만 있으면 즉시 개통될 수 있어서다.

마침 얼마 전 여당 관계자와 부산시가 함께 한 항공 노선 신설 실무진 회의에서 시가 노선 신설에 대한 경제성을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노선 개설 논의가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번에는 여야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적극 나서 항공 노선 개설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시름 깊어가는 양식 어민들 살릴 방안 마련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창 바빠할 양식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고물가에 생산비가 올라 수입이 감소한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격감하고, 고수온으로 양식수산물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여수·완도·진도 153개 어가에서 11개 양식어종 645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여수지역 122어가에서 우럭 등 양식 어종 600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으며,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와 진도에서도 전복 등의 피해가 잇따랐는데 재산피해액만 100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식수산물 집단 폐사 사태는 피해 규모가 크고 지역 어업이 어려움에 부딪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사료비, 어선 유티비, 전기세, 인건비 등의 생산비가 오를 데다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

서 어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업계가 위축돼 판로가 좁고 있어 어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피해가 커질수록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집단폐사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그나마 폐사를 피한 물고기도 판로가 좁고 있어 어민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올렸던 전복 양식어가 역시 고수온 폐사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당하고 보니 이리다 다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자연재해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집이다. 수산당국은 철저한 피해조사를 진행해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해 어민들의 시름을 감싸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군대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인식됐던 경찰(警務)이 분화돼 독립된 기관이 된 것은 근대국가에 들어서다. '경계하여 살피다'는 의미의 경찰은 19세기 초 영국이 광역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근대에서 완전히 분리됐다. 당시 영국은 붉은색 계열인 군복의 반대색인 푸른색으로 경찰복을 만들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비무장 원칙을 지켜 경찰봉 이상의 무장을 자제했다.

경찰국가라는 표현도 있다. 18세기 유럽에서 국가 권력이 모든 것에 개입하는 절대국가를 그렇게 불렀다. 반대어가 야경국가다. 위험한 밤에만 살피는 법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다. 경찰이라는 개념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6·25 전쟁, 군사정권 등 오랜 기간 경찰은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법원은 기본이었고, 불심검문은 예사였다. 과도한 대응에 비인권적 고문까지 경찰은 국민의 아닌 권력자 편에서 그 권력을 더 공고히 해주는 기관이었다. 2000년대 들어 그 권위가 누그러지고, 국민의 결의로

다거서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에 의해 견제·감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장과 밀착된 1차 수사기관으로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의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전남도청이 술렁이고 있다. 경찰이 전남도청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50여 명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을 실무를 맡고있는 7-8급 직원으로, 하반기 여러 중요한 일정이 있는 도청

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수

사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이미 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잘못을 적발한 전남도청과 사전 혐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정도가 심각한 사례로 한정하고, 사소한 경우는 해당 기관이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하게 하는 상호 조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성과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일방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현성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